

안보통일센터

중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론” 주목

2017. 9. 28



SECURITY FOCUS

안보포커스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THE YEUIDO INSTITUTE

1. 중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론' 논란 확산

□ 중국의 북핵 대응 관련 '전통좌파 vs. 우파'간 인신공격적 설전

○ 주목 인물

- 자칭궈(賈慶國) : 우파·비주류,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외교정책 자문기구) 상무위원,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
- 주즈화(朱志華) : 전통좌파(관변)·주류,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 연구회 부회장, 공안 출신

○ 자칭궈와 주즈화 간 북핵 대응 논쟁 촉발과정

- 자칭궈, 한국 방문時 중국 관영매체 중국평론통신사 인터뷰(9.9)
: 중국정부의 '쌍중단' 방안은 실효성 얻기 힘들다고 비판
※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 주즈화, 자칭궈 인터뷰 비판(9.11)
: 자칭궈 주장은 완전히 한쪽(한·미) 편을 든 것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과 여론 오도
- 자칭궈, “중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론”을 호주 ‘동아시아 포럼’紙 기고(9.11)
: 북·미 군사충돌 가능성 고조, 중국은 한반도 위기時 한·미와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자칭궈, “목소리가 높다고 이치가 서는 게 아니다” 기고문을 통해 주즈화 비판(9.15)
: 北 위기時 미·중 군사 충돌 원하는가!

○ 中 내부 북핵 해법 충돌 : '한반도 전쟁 원하나' vs. '美앞잡이 될 건가'

-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9.17), 자칭궈-주즈화 논쟁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군사충돌 폭발 우려”(국제주의파(비주류)) vs. “美편들기, 국익해쳐”(민족주의파(주류))로 정리

- 국수적 성향의 환구시보(環球時報), 중국사회가 이 일로 분열대선 안되며 북한과 한·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중국의 이익만 생각할 것
-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고급연구원, 북한에 석유공급을 끊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싱가포르 연합조보, 9.15)
- ※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고 또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관계만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

[자칭귀-주즈화 논쟁 골자]

자칭귀 (국제주의파)		주즈화 (민족주의파)
“북핵 관련 국가들 모두 책임. 미국 비판해야 하지만, 북한 비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아냐”	북핵 책임 누구에게?	“중국은 책임 없고 미국의 책임 거론해야 하며, 자칭귀는 한·미 편”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인정하고 한·미와 위기 대응방안 논의해 불필요한 미·중 간 충돌 막아야”	한반도 위기 대응방향	“한·미와의 위기대응 협의는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한·미와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不可”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불가피”	중국의 對北제재	“원유 공급 등은 북한정권 불안정 우려뿐 아니라 북한의 공격목표가 중국으로 이동하게 만들므로 不可”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미치며, 핵개발 자체가 잘못된 것”	북한의 핵 개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미국이 북한안보를 위협하므로 불가피하게 북한이 핵 개발”
“완고하고 오만하며 유아독존. 걸핏하면 다른 의견 금지. 학자는 용의자 아냐”	상대에 대한 날선 공격	“허튼소리. 중국 사회주의외교 핵심에 어긋나고 중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손해”

□ 중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 : ‘해야 한다’ vs. ‘이르다’ 贊反 팽팽

-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SCMP), 중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 논란 촉발

○ 북핵 해법에 관해 중국정부와 다른 목소리 분출 확산

- 중국은 역내에서 발생 가능한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他國과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언급 보도(What if worst comes to worst with North Korea? China ‘must be ready’ for war on the peninsula, 홍콩 SCMP 9.25)
- 특히, 자칭귀 교수의 (국제주의적) 주장이 중국학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

○ 자칭귀 교수의 ‘한반도 전쟁 대비론’ 컨틴전시 플랜의 핵심

- 중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China ‘must be ready’ for war on the peninsula”)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時 중국이 대비해야 할 5대 과제 제시
 - ㉠ 북한 핵무기 처리
 - ㉡ 대규모 난민 유입 대응
 - ㉢ 북한內 사회질서 회복
 - ㉣ 북한정권의 재편
 - ㉤ 북핵 폐지時 한반도 사드시스템 제거

○ 지칭귀 주장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반응

- 지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쑨징제(孫興傑) : 북한 붕괴를 가정한 비상계획 준비 강조
 - ✓ 북한체제 붕괴時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함
 - ✓ 북한난민 유입 해결을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안전지대 설치
 - ✓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라도 핵무장 국가간 직접적인 충돌은 어려우므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

- 런민대 교수 청샤오허(成曉河) : 중국의 對北 이익 극대화 필요
 - √ 중국의 기본이익은 北 핵무기 제거 및 미군이 38선 이남에 머물게 하는 것
 - √ 북·중 국경협정, 중국에 대한 북한의 채무 상황, 북한에서의 중국 상업 소유권 보호 등이 주요 고려사항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 뤼차오(呂超) : 북한 변화를 논하기가 이룸
 - √ 북한난민문제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김정은정권의 붕괴 징후가 아직은 없음

2. 시사점

□ 주류-비주류간 논쟁을 확대하는 중국의 의도 주목

○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사 충돌 우려 확산을 언론을 통해 공개화한 의도에 주목

- 자칭귀와 주즈화 두사람의 논쟁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보는 전통적인 주류(좌파) 견해가 비주류(우파)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주류가 발끈하는 상황

- 중국의 반대를 무시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또 중국 동북지방의 방사능 오염 공포와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주류가 주류적 시각에 도전하는 양상

- 양측간 갈등은 중국이 대북제재에는 동참해야 하지만 북한정권을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북한 미사일이 중국을 향할 정도가 되서는 안된다는 딜레마적 상황을 반영

- 영문 잡지·신문을 통해 ‘한반도 전쟁 대비론’을 제기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용 언론플레이

※ 국내용이었다면 「환구시보」를 활용했을 것

- 또한,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를 통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게 보내는 중국의 전략적 對北 스탠스를 간접 표명

○ 중국이 한·미와 위기대응방안 논의 및 미·중 충돌을 막겠다는 메시지

- 자칭귀 교수의 언급처럼 중국은 북한이 느낄 좌절과 소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미와의 대화를 놓고 안팎으로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베이징은 서울·워싱턴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음을 강조

- 또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 결과로 김정은정권이 붕괴하면 중국과 미국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 핵무기 처리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미·중간 先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시사

□ 중국, 유엔 안보리의 엄격한 대북제재 동참 의지 시사

○ 중국의 對北제재 적극 이행

- 자칭귀 교수를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한편, 북한의 도발 확대는 엄격한 對北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의한 쌍중단·쌍궤병행 수용이 해법임을 강조
 - ※ 쌍궤병행(雙軌並行)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 중요한 점은 중국의 이러한 스탠스가 미국의 對北 군사공격을 일정수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북한 해외 공관과 北 내부 고위층의 불안감 조성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한반도 책임론’에서 한발 빼기

- 미국의 對北 군사적 공격을 상정한 한반도 전쟁 컨틴전시 플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수용
 - 중국정부는 이미 쌍중단·쌍궤병행을 위한 대화와 협상 제시
 - 그럼에도, 미국의 對北 군사적 공격 결과로 北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할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
 -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미국의 對北 선제적 군사 옵션의 결과로 귀결되며, 北 붕괴時 중국은 자국 이익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

3. 제 언

□ 黨의 한·중 의원외교 강화 및 대화채널 확보

- 당 차원에서 中共黨의 합당한 카운터파트를 선정, ‘黨대黨’ 의원외교 활성화
- 黨과 민간으로 구성된 ‘한·중 공공외교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 검토

□ 民·官 1.5트랙 대화 및 한·중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중국의 의도 파악 필요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회피론과 對美 책임전가론에 대한 한·미의 대책 마련 필요
- 중국의 기본이익은 北 핵무기 제거 및 미군이 38선 이남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내에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 한반도 新통일론 수립을 위한 중국과의 소통 창구 개설 필요
 -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통일時 미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통일의 지지를 유도
 -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사드문제의 해결점 모색 기회로 활용

[작성: 윤승현 연구위원]